

## 200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구상



閔 晟 基 / 국방부 획득개발국  
공학·경제학박사



군비축소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장비에 신기술을 활용한 질적 개량을 이룩해야 한다. 또한 걸프전의 교훈에서 보듯이 고도 첨단병기들을 개발·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정책도 국내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전환하고, 국내개발시 국과연주도에서 업체주도로 전환하며, 핵심기술 부품을 집중 개발토록 하고 국제기술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도 2천년도 이전에 5%선까지는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초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국방의 목표아래 한 국군 현대화 계획 및 전력증강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육성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정부의 육성지원으로 小火器, 박격포, 곡사포, 탄약, 車輪차량, 장갑차, 소형함정, 경헬기, 전투기등 軍 기본병기 대부분을 자급하게 되었으며, 현재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 구축함등 일부 고도정밀병기의 양산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의 방위산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으나, 재래식병기에 대한 군 소요물량이 대부분 충족됨에 따라 방산업체의 가동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능력 부족으로 고도 첨단정밀병기의 연구개발 투자도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민주화 및 평화공존정책과 남·북한 관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군비통제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평화공존이 마치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환상적인 감상에 젖어, 국방비 삭감이 사회 일각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방위산업이 과연 필요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방위산업은 2천년대를 향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즉 2000년대 방위산업의 내용과 질은 어떠한 것인가?

특히 지난 걸프전의 교훈과 더불어 우리의 방위산업 목표를 구상한 다음 이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방위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은 방위산업 기술개발에 치중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현실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 '70년대에 조성된 국방기술개발의 활기가 꺾여 버린것이 늘 아쉽게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의 방위산업을 도약의 발판으로 하여 미래의 방위산업을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과 어떠한 혁신적인 전환도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방위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산업 위상

'90년대 들어와 미·소 양극체제에서 동서간의 냉전 종식후 신 데탕트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걸프전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구조개편으로 국가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실리위주의 국가적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 질 것이다.

또한 소련, 미국을 중심으로한 군사적 패권위주 국가보다 일본, 독일 등의 경제 우선정책 국가의 번영으로, 이데올로기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경제 및 기술중심의 미국, 소련, 유

럽공동체, 일본, 중국의 경제 중심 5극(極) 체제로 발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속에 놓여 있다.

그간 미국은 세계속의 군사적 균형자 및 최종 안보 보증자로서의 역할로 누적된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군사력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국방비를 '90년 GNP대비 5.4%에서 '96년 3.6%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동북아 주둔 미군감축 및 역할 축소와 이를 위한 신속대응군으로 전환하고, 안전(Security)이 아닌 안정(Stability)을 위해 소련, 중국, 일본간의 상호견제관계를 유도하며, 특히 일본으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군사력 강화를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일본의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은 양과 질에서 현재도 한국에 비해 5-6배나 우월한데, 향후 일정수준의 군사비 강화를 인정하고 세계첨단의 기술과 경제력을 군사화할 경우 우리와 큰 격차를 나타낼 것은 명백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막연한 남북한 통일의 환상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미국, 소련, 중국 및 일본등 주변국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제작하는 500MD 헬기

'83년 이후 방위백서에 나타난 일본의 전쟁 수행능력과 범위는 「일본영토, 영해, 영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확장가능」함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으로서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크게 바꾸어놓게 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도 1인당 GNP가 1천37불로 한국의 5천5백불에 비해 약 5분의 1수준이며, 무역적자 누적과 함께 외채상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군사력 면에서 남한에 비하여 병력 1.5배, 장비수 2.0배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지탱해나가는 데 필요한 군사투자비 부담이 매우 커, 북한은 군비축소를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점증하는 사회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군비감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가나 전쟁위험이 존속하는 한 그것은 앞뒤가 전도된 주장이라고 본다.

원래 군비통제의 개념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안전과 안정속에 평화공존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적대하는 국가들이 상호 합의하에 군사력 운용을 통제하고, 또한 군사력의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전쟁발발의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먼저 군사력의 운용 통제를 통해 군사적 신뢰가 어느정도 구축되면, 군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상호균형된 적정규모의 「방어전력」유지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불균형된 전력부터 우선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호 감축하는 방안이 예견된다. 따라서 기습공격과 공세작전 능력 제지를 위하여 검증가능한 공격용 특정 장비부터 우선 감축되어진다면, 그 대상장비는 전차, 자주포,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와같은 군비감축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변화할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남혁명 기본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핵, 화학무기 등 전략무기 확보노력의 가속화와 함께 군사시설의 지하화 등 전쟁준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방위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그 나라의 안보환경과 경제력이라고 볼때, 우리는 막연한 통일의 환상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실질적 종식을 나타내는 통일을 달성할때까지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미국, 소련, 중국 및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면, 바로 지금이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야만 할 때이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 20년동안 재래식 병기를 위주로 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으나, 군비축소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 상호 양적축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장비의 성능개량을 통한 질적우위확보와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첨단병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산업체 육성정책에서 방위산업 기술육성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할때이다.

## 一笑一少一怒一老

### 아빠의 눈물

임종을 보기 위해 자식들이 둘러앉아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얘들아, 너희 엄마의 음식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애 영수야! 가서 부침개 한쪽만 갖다 주겠니?」

하고 말했다.

잠시후 부침개를 가지러 간 영수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아버지가 의아한듯이 물었다.

「영수야 왜 빈 손으로 돌아왔니?」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버지 드릴건 없고 내일 문상오시는 손님들 대접할 것밖에 없는데요』

'90년대 안보환경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곧 우리의 국력이 향상되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국가의 필수적 생존전략인 안보를 위한 방위산업은 그 내용과 질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과학기술 육성과 더불어 방위산업 재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은 몇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방은 국가경제를 바탕으로한 보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주국방의 초석으로 시작한 우리의 방위산업이 바로 보험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 2천년대의 방위산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2천년대의 방위산업은 북한의 군사대결 포기와 점증하는 주변국에 대한 갈등요인을 해소할수 있는 한차원 앞선 군사력 건설방향에 입각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 단순 對北 억제전력의 일환으로 북한을 「따라 잡기식」으로 전력증강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 우리는 성장하는 국가경제력을 바탕으로 對北·對 주변국 억제전력증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나가야만 할 시점이라고 본다.

新군사력 건설방향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신기술을 동반한 군사기술의 첨단 과학화로 정밀 유도무기체계, 전자전 능력, 우주공간의 안보 영역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걸프전은 우리의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걸프전을 통해 미국은 21세기 전쟁양상의 가장 전형적인 새로운空地입체 전쟁모형을 제시하였고, 제공권 장악 및 전략목표 초토화를 위한 항공전력의 절대 우위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전쟁의지의 감쇄와 사기침몰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력발휘시 승수작용을 과시한 C<sup>3</sup>I 능력은 전쟁수단의 적시적 집중과 절약을 도모

하였으며, 기습공격시 이라크측 전파교란과 통신지휘체제 마비에 성공할수 있었던 전자제압기 편대군의 역할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아파치(Apach), 코브라, A-10기 등은 對 전자전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가장좋은 대전차 무기가 전자차라는 종래의 개념을 불식시켰으며, 또한 전자차는 공중 PGM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한 위력의 PGM은 지하시설물 파괴까지도 성공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전자기동로 개척장비인 지뢰제거 전자, AVLB 등 교량가설차량의 필요성도 입증되었다.

2천년대 우리의 방위산업은 바로 걸프전에서 본 고도첨단 과학기술을 동반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위산업이어야 한다. 즉, 핵심기술을 동반한 신무기체계인 고도첨단병기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기존무기체계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성능개량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갖추지 못한 새로운 군사기술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확보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2천년대 우리 방위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하겠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핵심 신기술로서는 컴퓨터, 전자, 신소재, 신물질 기술 등을 들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기술을 개발 및 적용한 2천년대의 우리 무기체계는 정보·전자분야에서 군사위성을 비롯한 영상위성체계, 정확한 표적정보 획득을 위한 3차원 레이더, 초점면 배열방식의 열상장비, 투과력이 우수한 정밀광학 추적장치 및 레이저 거리측정기, 전자전 장비로서 방탐(ESM), 교란(ECM) 및 대응교란(ECCM)등의 정비를 갖춘 지휘·통제·통신·정보(C<sup>3</sup>I)체제를 구축하게 될것이다.

유도무기분야에서도, 장거리 전략타격무기를 비롯한 지대공, 함대공, 공대공, 함대함미사일과 수중발사 유도탄 및 어뢰등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다.

한편 재래식 병기의 성능개량사업으로 대공화기와 유도탄을 복합한 대공무기, 사거리



자주국방의 초석으로 태동된 우리의 방위산업은 2천년대를 향하여 국방첨단기술과 더불어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의 민수과학기술이전을 극대화한다면, 방위산업 기술개발은 곧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체가 되어질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사진은 세계 4번째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현대정공의 자기부상열차

와 명중도를 향상한 자주포, 자동장전 및 대구경포를 장착한 한국형 전차, 고기동성 전술차량, 전투공병장비 및 도하장비, 화생방 탐지·식별·경보기능이 일체화된 경보기, 개인 및 집단보호장비, 각종 제독 및 해독제도 개발될 것이다.

함정 및 수중무기 분야에서는 중잠수함을 비롯한 헬기탑재 초계함, 차기세대 중어뢰, 소나, 부유식 및 자항식 음향대향체계가 개발되고, 항공전력분야에서도 고등훈련기 및 전술기 자체개발, 헬기, 정찰 및 기만용 무인항공기들이 개발될 것이다.

이와같은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2천년대에는 전자공학과 컴퓨터기술, 그리고 신소재 기술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무기체계가 우리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 방위산업정책 발전방향

미국정부는 오는 2천년까지 「국가 핵심기술」의 개발·보호에 관해 1년에 두번씩 심의토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첫번째 대통령 보고내용에서, 미국은 군사력 우위와 산업경쟁력 강화책으로

신소재, 컴퓨터,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분야등 22개의 주요 기술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로 규정하고, 이의 개발 및 기술보호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걸프전에서 사용된 첨단 하이테크 무기에 일본 전자기술이 상당부분 뒷받침됨으로써,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하이테크 무기에 쓰이는 기술이전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美 국방부는 방위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질 좋고 값싼 일본기술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비해, 일본은 첨단무기용 기술과 부품이 갈수록 민간용 상품기술과 구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무기의 공동개발이란 이름으로 실제 일본 민간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가 미국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세계 제일을 자랑해온 항공·무기분야에서도 신소재·전자 등 일부분야는 일본이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실제적인 면에서 볼때 일본은 무기의 독자 개발에서도 세계 최고정밀도를 가진 요격용 미사일 AAM3을 만들어 냈는가 하면, 2천년대까지 배치를 목표로 호크미사일을 대체할 중거리 샘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체니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미·일 군사기술협의회에서 『일본의 군사·민간용 기술이 미국 군수산업의 기반을 정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고 은근히 기술의 지속적인 이전을 요구한바 있다.

뿐만아니라 차기 방공미사일 「코즈」의 개발에 일본의 공동참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측에 로켓트용 엔진기술, 마이크로파, 적외선 유도장치, 자장 분석평가 기술등의 이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지금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속에 「일본의 기술하청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립적인 선진국으로 나갈 것인가」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등 선진국들은 기술주권주의 제창을 통한 국가 이기주의 실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립적 노력에 의한 선진화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는 몇개의 분야만이라도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번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우리만이 갖는 전략기술개발에 가능한 모든 투자와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 당신은 없소?

배꼽이 2개인 여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첫날밤 걱정이 돼서 견딜수가 없었던 이 여자가 신랑에게 먼저 고백했다.

「저... 용서해주세요. 사실은 당신하고 나하고 배꼽을 합치면 모두 3개예요」

그러자 신랑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아니, 그럼 당신은 배꼽이 없단 말야?』

우리의 방위산업도 민수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개발만이 재도약을 이룰수 있음을 거듭 인식하고, 2천년대의 방위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先 국내개발 정책으로 전환

과거 10여년동안 무기체계는 장기소요도출이 미흡하였으며, 中期소요도 소요시기가 임박하여 선정함으로써 해외구매 위주로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획득방법도 국내개발이나, 해외구매나 하는 의사결정을 종합적인 분야별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기술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본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동반한 무기체계를 어떻게 우리의 기술로 국내개발 할수 있는가 라는 추진방법을 판단, 정책적인 종합획득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장기 소요도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3년여동안 합참본부에서 통합 군사력 건설 차원의 소요를 도출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연구개발과 기술도입생산에 의한 국내생산정책이 해외구매보다 선행되어지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 둘째, 국내개발시 개발주도를 업체주도로 전환

지난 20년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위주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기반이 조성된 것은 論外的 사실이나, 國科研 주도 개발로 방산업체는 적극적인 개발 참여보다는 피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개발도 핵심기술 부품은 도입하여 조립하는 시스템위주 개발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 2천년대를 향한 고도정밀병기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국과연 위주의 백화점식 시스템 개발에서 탈피하여, 몇가지 전문적이고 비경제적인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감

히 업체주도로 전환하고, 업체주도시 정부는 개발비를 先투자할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계약방법 또한 현재의 시제계약이 아니라 개발계약으로 전환하고, 주계약업체제도를 적용하여 개발업체의 시스템 책임을 확실히 부과하며, 부품협력업체도 최초계약시 모두 선정하여 추진토록하여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전문계열화를 달성할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셋째, 핵심기술·부품의 집중개발 추진

첨단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위주의 개발전략에서 핵심기술을 동반한 부품개발에 집중적인 선별투자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국방에서의 핵심개발 및 부품개발 대상품목은 국제간의 상호 견제를 받고 있는 전략부품 및 외국정부 통제품목, 고도정밀 부품으로, 바터제 대상품목, 두뇌집약적 소프트웨어 기술개발품목 등을 들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이 용이한 대상만을 선정하여, 개발성공이 거의 확실한 조립위주 개발정책으로 국과연 및 방산업체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해왔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자주국방을 실현시킬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 개발체제로 전환하여, 다시한번 '70년대의 개발의지를 되살려 국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방위산업 재도약을 이룩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본다.

또한 일반대학에 국방관련 연구소를 특화(特化)시켜 기초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응용화할때에 대학 우수두뇌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접목시켜 활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실용화할때는 기업체로 연결시킴으로써 핵심기술개발과 더불어 우수두뇌집단을 대학에서 부터 조기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방비 투자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확산해 나가야만 한다.

### 넷째, 국제기술협력 확대정책

우리의 국제기술협력은 197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80년대 들어와 무기체계 도입선 다변화정책으로 유럽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기술보호장벽이 두꺼워지고 특히 첨단기술은 협력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기술시장에서도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핵심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방산·군수협력도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기존 형성된 방산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부족한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소련, 동구권과의 협력증진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에게 형성된 기술 또는 필요한 기술정보를 수집, 가공처리 및 전파할수 있도록 국방기술정보센타를 활성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만 한다.

### 다섯째, 국방연구개발 투자확대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 선진국은 국방연구개발에 국방비의 5-12%를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2.1%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70년대 3% 수준에서 '80년대에는 1.5%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약 2.0%선에서 머물러 있다.

투자액수 면에서도 우리의 연구개발비에 비해 미국은 360배, 일본은 5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우리의 국방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확대되어야만 한다.

先 국내개발 추진, 업체주도 전환에 따른 개발비 지급,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국제기술협력 확대, 국내 시험평가능력 보장 등을 위해서 2천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최소한 국방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국방연구 개발에 국방비의 5-12%를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2.1%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70년대 3% 수준에서 '80년대에는 1.5%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약 2.0%선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이 자랑하는 LAVI 자국산 전투기



비의 5%선까지 국방연구개발비 투자가 요구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투자액수면에서 미국의 2백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우리 국방기술개발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종사자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 맺는 말

지금 우리는 막연한 남북한 통일의 환상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실질적 종식을 나타내는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미국, 소련, 중국 및 일본등 주변국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균형자(均衡者)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방위산업의 질과 내용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군비축소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장비에 신기술을 활용한 질적 개량을 이룩해야 한다.

또한 걸프전의 교훈에서 보듯이 컴퓨터기술, 전자기술, 신소재기술 및 신물질개발 등을 통한 고도 첨단병기들을 개발·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정책도 국내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전환하고, 국내개발시 국과 연주도에서 업체주도로 전환하며, 우리의 방위산업 기술개발의 요체인 핵심기술 부품을 집중개발토록 하고 국제기술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투자도 현재의 국방비대비 2%선에서 2천년도 이전에 5%선까지는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지난 70년대부터 20여년간의 방위산업 육성차원의 정책에서 국제 신질서에 조화를 이루고, 국가 생존전략의 필수요인인 과학기술 발전을 접목한 방위산업 기술개발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90년대 안보환경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의 국력신장에 대처할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국방이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 보험적 기능을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면, 자주국방의 초석으로 태동된 우리의 방위산업이 2천년대를 향하여 국방첨단기술과 더불어 실질적인 내용과 질의 변화로서 발전되어져 가야만 한다고 본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의 민수과학기술 이전을 극대화한다면, 방위산업 기술개발은 곧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체가 되어질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